

가스공사 오강현 사장 해임 “혈투”

비상임 이사회 해임결의 반발 법적조치 강구 ... 노조는 무효 가처분

한국가스공사 비상임 이사회가 3월14일 오강현 사장 해임결의안을 가결한데 대해 오강현 사장이 소송제기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오강현 사장은 3월15일 사내 전산망에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께> 제하의 통신문에서 “이사회는 불법·부당한 결정에 대해 제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법에 의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불행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상임 이사회 결정에 대한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이사회는 상식이하 결정은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투명하고 자율적인 공기업 경영원칙에도 배치되며, 비상임 이사회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성과 평가와 관계없이 외부압력에 의해 건강부회식의 왜곡된 사유로 공기업 조유의 사장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가 제시한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시 노조집회 방치 ▲정부와 협의없이 LNG 도입물량 감축 부분은 이사회 개최당일 추가한 것으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3년 9월 사장선임 이후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국가이익 우선과 회사이익의 조화라는 원칙을 유지했고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영업면에서도 최대실적을 시현했다”고 자평하고 경영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임직원들에게 호소했다.

3월10일부터 스페인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스 관련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한 오강현 사장은 3월14일 이사회 해임결의안 가결을 보고받고 e-메일을 통해 사내 전산망에 올렸다.

오강현 사장은 3월18일 귀국한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는 사장 해임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이사회결의 무효 가처분신청과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산업자원부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키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은 사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무관하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부의 외압에 의한 것이 명백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3월31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오강현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는데 정부(26.86%)와 한전(24.46%), 지방자치단체(9.86%) 등 공적 지분이 61.18%로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3/16>